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493
----------	------

발의연월일 : 2024. 10. 2.

발 의 자 : 주철현 · 김문수 · 한정애
송기현 · 송옥주 · 임호선
박정현 · 허영 · 박균택
윤준병 · 황명선 · 이병진
조인철 · 이건태 의원
(14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는데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업분쟁, 도서의 관할분쟁, 해저자원의 개발분쟁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양의 이용 및 개발이 다변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계가 명확한 육상과 달리 해양관할구역은 이와 관련한 법률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나,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 또한 법률상 근거가 부재하여 재판의 결과까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

될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원칙을 정립하고 획정의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보전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해양관할구역 획정의 기본원칙과 획정 기준을 정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확인이나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하여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나. 해양관할구역획정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변경, 해양관할구역획정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양관할구역획정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할구역획정안을 작성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대한 합의안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

회에서 확정안 또는 확정합의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18조
부터 제20조까지).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할구역확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
라 해양관할구역을 결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정에 이
의가 있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관할구역 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해양관할구역의 획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해양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보전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한 토지의 바다 쪽 경계로부터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의 외측한계(外側限界)에 이르는 해역 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구역을 말한다.
2. “등거리·중간선”이란 서로 인접하거나 마주하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점(起點)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을 확정함에 있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해양관할구역의 확정·변경 및 유지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확정에 관하여는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해양관할구역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해양관할구역 확정의 원칙 및 기준 등

제5조(해양관할구역 확정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 해양관할구역의 확정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해양접근성 확보와 이용에 관한 형평성
2.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행정적·경제적 및 생활상 이익의 침해 최소화
3. 해양의 효율적 이용
4.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확정이나 관련 분쟁의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이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6조(해양관할구역 확정 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을 확정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
2. 관할구역 확정 대상 해역(이하 “대상 해역”이라 한다)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실태 및 행정권한의 행사 내용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서(島嶼)의 행정구역
4. 행정구역의 관할 변경 이력
5.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
6. 주민의 행정적·경제적 이익
7. 대상 해역에 관한 사무처리 현황
8. 대상 해역과 관계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현황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의 기준에 따른 해안선
9. 등거리·중간선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관할구역 확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합의의 반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

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확인이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해양관할구역)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행정시·구”라 한다) 및 읍·면·동의 해양관할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례로 행정시·구 또는 읍·면·동의 해양관할구역을 정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 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광역시장·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회 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수산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및 이에 상응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5조에 따른 해양관할구역확정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6조에 따른 해양관할구역확정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양관할구역획정안
4. 제22조에 따른 해양관할구역 획정 절차의 시작 여부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
·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자료 제출의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에 의견을 밝히거나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해양관할구역획정추진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보좌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관할구역획정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5조에 따른 해양관할구역확정기본계획의 입안
 2. 제16조에 따른 해양관할구역확정추진계획의 입안
 3. 제17조에 따른 조사 및 측량 등
 4.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양관할구역확정안의 작성·수정 및 변경
 5. 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안전 사전 검토 등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및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확정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해양관할구역확정지원단을 둘 수 있다.
- ④ 그 밖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해양관할구역확정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확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를 게을리 수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해양관할구역 확정 절차

제1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마다 해양관할구역확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해양관할구역 확정 추진 방향 및 원칙
2. 제16조에 따른 해양관할구역확정추진계획의 수립 방향
3. 제2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확정 신청 수요조사 계획
4. 해양관할구역 확정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고시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의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할구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해양관할구역확정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대상 해역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
2. 해양관할구역 확정 관련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관할구역 확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고시된 추진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의 절차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 및 측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을 확정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측량,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조사 및 해당 구역의 이용·관리 실태 조사 등 제6조에 따른 해양관할구역 확정 기준에 따라 조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조사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해양관할구역획정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조사등을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획정안(이하 “획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30일의 범위에서 의견수렴 기간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획정안을 수정·변경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획정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획정합의안의 제출 및 반영 등)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한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대한 합의안(이하 “획정합의안”이라 한다)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기간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획정합의안을 반영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른 획정안을 작성하거나 수정·변경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획정합의안의 제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의견수렴 기간을 9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확정합의안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확정안의 심의·의결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확정안,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결과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합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확정안 및 확정합의안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조사 및 재조사 결과에 따른 확정안의 작성 등에 대해서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해양관할구역의 결정 및 불복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의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판 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만료되거나 제4항에 따라 다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을 확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해양관할구역의 결정 및 통보·공고 방법, 제5항에 따른 해양관할구역의 획정 및 공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신청에 따른 해양관할구역의 획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신청(이하 “해양관할구역획정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해양의 이용, 관리 및 보전에 있어서 관할구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2.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획정한 해양관할구역이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양관할구역 획정 절차의 시작 여

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2항에 따라 해양관할구역 확정 절차의 시작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그 밖에 해양관할구역 확정신청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7조의 조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나 어장(漁場), 양식장을 포함한 공유수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토지등에 출입
2. 토지등에 있는 나무, 흙, 시설물, 그 밖의 장애물의 이전·변경
3. 토지등의 조사등에 필요한 장비 등 적치
4. 토지등을 임시도로로 사용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입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출입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출입 일시와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토지등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토지등의 소유자등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토지등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등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토지등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제2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원의 판결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확정된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의 판결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확정된 해양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분쟁해역에 대한 유예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양관할구역 확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분쟁해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을 확정한다.

제4조(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중인 해역에 대한 유예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법」 제5조제5항부터 제10항에 따라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중인 해역은 매립지의 귀속 지자체가 최종 결정된 후에 해양관할구역을 확정한다.